

특별연금으로 잠녀문화 세계화한다고?

잠녀 양성·잠녀문화 세계화 공약 실천위 복지분과 맡겨지며 정책 의지 의문
문화정책·수산정책·해녀박물관 등 실국 구분 모호... "분과 구분 큰 의미 없어"

등록 : 2010년 07월 21일 (수) 09:28:18
최종수정 : 2010년 07월 21일 (수) 09:28:1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국제저널 「무형유산」 국제편집자문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제주 무형유산탐방단이 지난 2월 제주해녀박물관을 방문, 해녀 노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자료사진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잠녀·잠녀 문화 보존·계승 방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해 잠녀와 잠녀 문화 세계화를 추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보존·계승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달리 지난 13일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잠녀 관련 과제를 복지 분과로 넘기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지사 공약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방안에 따르면 부서 소관이 불분명한 공약은 해당 국간 우선 협의를 통해 소관을 정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운영위에서 협의·조정토록 했다.

하지만 행정기구 설치 시행 규칙에 따라 복지 분야에 맡겨진 '김만덕 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과 달리 잠녀 양성과 잠녀 문화 세계화는 세부 계획 중 가칭 '특별연금제도' 부분을 이유로 복지분과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해녀조례 제정 당시에도 문화정책과와 수산정책과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 이번 역시 잠녀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복지 분과에 과제가 맡겨지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 조성이 소원해질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실천위에 제출된 자료 중 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은 일부에 그쳤으며 대부분 현재 잠녀 수와 복지 지원 등 현황 파악용으로 확인됐다.

잠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은 관련 조례안을 제대로 활용하면 가능한 부분인데다 '특별연금'의 경우 현재 도내 잠녀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으로 노령연금대상자고, 기타 복지제도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부 구분이 모호한 과제는 분과에 상관없이 정책 제안자에 자문을 얻어 현실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국별 워크숍이나 보고회, 최종 수정 과정이 남아있는 등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